



눈 쌓인 녹차밭 19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녹차밭이 쌓인 눈으로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수면 위로

국정과제 점검 회의서 “지방시대 균형 발전 도움” ‘직선제 성과나, 폐해나’ 논란 등 교육계 오랜 쟁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2일 국회 토론회 예정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를 언급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균형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의 오래

된 쟁점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러닝메이트제는 그동안 ‘깜깜이 선거’ 등으로 불렸던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됐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정책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 등으로 교육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과도한 선거 비용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줄여 교육 정책을 효율적으

로 집행할 수 있는 점 등을 러닝메이트의 기대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러닝메이트제는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시대정신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측도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 확대,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확산,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등의 성과를 가져온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회견을 맡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의원과 이달 22일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선 ‘교육감 선거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제안 토론을 이어간다. 전선희기자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도내 진보인사 압수 수색

국정원이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이날 국정원은 제주도당에 위치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택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전국농

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날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9일에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과 제주도 이도2동에 있는 강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상민기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 무산

월정리 비대위 어제 차량 진입 차단… “계속 문화행사 열 것”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재개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사업체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에 따라 19일 오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차량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월정리 주민들은 문화행사를 열며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아섰고 공사 업체는 이날 공사 재개를 포기하고 철수했다.

비대위는 공사업체들이 공사 재개를 시도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문화행사를 열어 공사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용천동굴 등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증설사업 시공사(대저건설 등 2곳)가 월정리 주민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은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법원의 인용에 따라 19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월정리마을회에 지난 8일 공문으로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부하수처리장의 일 평균 하수량은 1만1864t으로, 현재 시설용량 1만2000t/일 대비 98.9%에 이르러 하수량 초과가 우려된다며 증설공사 재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월정마을 비대위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는 애초 문화재 보호법과 유네스코세계유산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어 공사 강행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예정지는

분뇨처리 오폐수 처리시설로 허가받지도 않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도 받지 않아 공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1일 최대 처리량 1만2000t을 2만4000t 규모로 늘리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공사를 시작했다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시작과 함께 중단된 상태이고 하수관로 증설공사는 마지막 50m를 남겨놓고 올해 1월 중단되면서 당초 538억원이던 공사비는 18%정도가 증가한 상태다. 위영석기자



19일 오전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앞에서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염 물질 제주바다 유출 크게 늘었다

전년대비 유출량 50배

올해 제주 바다에 유출된 오염 물질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해역에서 21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 119kg가 유출됐다. 이는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15건보다 6건, 유출량으로는 전년 2.4kg에 비해 5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오염물질 유출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7월 서귀포시 성산항,

제주시 한림항에서 잇따라 어선 화재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산항 화재로 어선 3척이 불에 타면서 오염물질 75.5kg가 유출됐고, 3명이 숨진 한림항 화재에선 어선 3척이 불에 타 16kg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오염사고 발생 건수와 유출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상산·한림 어선 화재사고 때문”이라며 “당시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폐건전지 등 135t 수거

제주시는 올 한 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135t을 수거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된다.

제주시가 읍·면·동을 통해 수거한 뒤 재활용업체로 운반 처리한 양은 폐형광등 79t, 폐건전지 56t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2020년 86t, 2021년 123t에서 올해는 135t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정이노베이션

2022년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지하수 수질개선은 지표에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관정 내부의 우물자재에 그라우팅 작업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폐하는 방법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존보다 장비의 성능개선 및 안전성 등 현장에서 작업자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여 양질의 수질개선 효과 증대

정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자연이 만들고 도민이 함께 누리는 제주다움 물의 비전에 부응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 복지 실현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과 혁신이 공존하는 신성장 물 가치 실현에 일조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분야

- 스마트마커 (누수감지)
- 지하수 수질개선
- 사실관정보호공 (관정용)
- 사실관정계량기함
- 공공관정 보호공
- 지하수 관측공

제주 제주시 중앙로 217(제주벤처마루) 607호 문의 064-723-9181